



스키장 안전사고 대부분은 '엉덩방아'

한국소비자원 슬로프 내 사고 분석

보호장구 착용하고 실력 맞춰 타야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스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 시즌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한 스키장 관련 위해정보 1221건을 분석한 결과, 1178건의 안전사고가 슬로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밝혔다.

슬로프에서 발생한 1178건의 사고 유형을 보면, 혼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0.5% (948건)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다른 사람과 충돌한 경우가 8.7%(103건), 스키장비에 의한 사고 5.8%(68건), 펜스·안전망 등 스키장 시설에 충돌 4.7%(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스키장의 주이용 연령층인 20대와 30대가 각각 37.4%(440건), 22.7%(267건)로 많이 다녔으며, 10대는 20.0%(236건)이었다. 20~30대는 스노보드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10대 이하의 스키 사고가 더 많았다.

스키를 타다 다친 부위는 무릎·발·다리 31.8%(197건), 팔·어깨 24.5%(152건), 머리 23.2%(144건)의 순으로 많았고 스노보드는 팔·어깨 36.6%(165건), 머리 20.8%(94건), 손·손목 14.0%(63건)의 순이었다.

스키의 경우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

도하게 벌어져 무릎·발·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게 되면서 팔·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내용을 보면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신체 일부의 골절·파절이 각각 37.4%(232건), 40.8%(18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스노보드는 뇌진탕과 뇌출혈 발생 비율(9.1%, 41건)이 스키(4.5%, 28건)보다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기본 동작을 숙지한 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해야 한다"며 "가급적 슬로프 중간에 멈춰 있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공정위, 납골당 불공정조항 칼 댄다

해지시 남은 비용 환불

과다 위약금 등 시정조치

앞으로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자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납골당) 이용약관·규정 중 '사용료 환불 불가' 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용

료 분쟁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봉안능력 2만구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납골당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골당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앞으로는 소비자가 납골당을 이용한 기간의 사용료와 계약 해지에 따른 납골당의 손해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소비자가 납골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납골당 사업자가 추모관, 유골 안치실 등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나서자 7개 민간사업자(분당영신추모원 서현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새로 나추모관 세광묘정공원묘원 영호공원 새하늘공원)는 모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9개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세종 성남 광명 천안 경주 창원 거제 하동) 중 8곳은 내년에 이용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시는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혼상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최소 적립 포인트 제한 사라진다

금융위 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추진

취약계층 7일 이내 대출 취소 가능

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1주일간 대출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주고 소액 금융 민원을 신속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별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 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은 이번이 처음 마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앞으로 3년마다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탈퇴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금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체계가 아닌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과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선 판매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 규제 준수 여부를 내년 금융사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상품 광고에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손실가능성 등)를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후구제의 실효성은 더 높아진다.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 처리하고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수 피해자 분쟁을 간편하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 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도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조치는 저축은행·연이자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외 보험업권 대출 표준약관 마련, 증권사의 신용공여 금리산정 기준 정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마련, 감독업무 전담 조직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카드사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 제때 고지해야

현금서비스 등 과도 이용시 등급 ↓

청구서 등에 경고문구 인쇄 권고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등 영업을 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을 제때로 고지하지 않는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고객 고지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신용카드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객들이 이를 모르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등급이 내려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환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개인 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주 이용하거나 액수가 크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과도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눈에 띄는 글씨로 인쇄하라고 권고했다.

또 ATM기기,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문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 검사 때 이런 사전안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고객은 대부분 저신용 취약계층이 많고, 잘 모르고 서비스를 받았다가 신용이 하락해 대출 금리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에 이런 가능성을 안내하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경고문구를 넣으려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금감원 방침을 최대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낮추는 한편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들에게도 신용평가시 신용카드와 똑같은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